‘기간제 근로자’ 편법 도입 쌈짓돈 아끼기

■ 광주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강행

사실상 의정비 인상·비정규직 근로자 양산 지적

“시기·절차적 문제” 불구 민주 밀어 붙이기 논란

광주시의회가 7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일부 시의원과 여론의 반대에도 편법적인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추진했다가 여론에 밀려 한 차례 유보한 뒤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강행키로 한 것이다.

시의회가 도입하기로 한 유급보좌관제는 애초 추진했던 ‘의정 서포터즈’가 아닌 ‘의정관련 조사활동 지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형태다. 시의원 보좌관 25명을 각 상임위별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고용해 일당 4만8800원에 10개월 동안 1220만원을 주는 조건이다.

시의회가 편법적인 ‘의정서포터즈’라는 카드를 버리고 ‘기간제 근로자’ 고용 형태를 선택한 것은 지난 2008년 행정자치부의 지방의회 입법 보조인력에 대한 해석 때문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에서 인턴보조인력 제도에 관한 질문 답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10개월 단위로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인력으로 10개월가량 기간을 정해 의회에서 (유급보좌관을) 공개 모집해 의원 개인이 아닌 상임위별로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형태 또한 사실상 유급보좌관제와 다를 바 없다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고, 시의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 양산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임위별로 고용하긴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고용 인원이 의장을 제외한 25명의 의원과 같은 숫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1~2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사비를 들여 보좌관을 쓰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원들이 매월 100만원의 자기 주머니 돈을 아끼기 위해 사실상 유급보좌관제도인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강행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좌관을 두고 있는 시의원들은 매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보좌관 봉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의정비 4855만원으로는 사실상 보좌관 운용이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결국 이번 편법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통해 사실상 의정비를 6000여만원으로 인상한 셈이 된다.

일부 시의원들이 유급보좌관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적·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강행한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총회를 비공개로 2차례 개최한 것도 ‘밀실 추진’이라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강행됨에 따라 지난 5대 시의회의 ‘4인 선거구 분할’ 강행처리라는 점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시의회 안팎의 시각이다. 따라서 대다수 초선 의원의 의회 입성으로 인해 개혁과 혁신을 바랐던 시민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화하는 박지원 원내대표-김관진 국방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7일 오후 박희태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행처리 불사” VS “실력저지”

여야, 예산안 정면 충돌 양상

한나라당 비상대기령 야5당 임시국회 요구

새해 예산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국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7일 정기국회 회기 내 강행 처리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실력 저지키로 하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 김무성,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박희태 국회의장 중재로 예산국회 돌파구를 찾기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예산안 강행처리 수순에 착수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 앞서 “이 순간부터 초읽기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에서 6일로 옮겨진데다 또 하루가 지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야당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강행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전날 새해 예산안 심사를 7일 밤 11시까지 마쳐달라는 내용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심사기간을 지정했으며, 8일 0시 이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도록 개의시간을 지정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예결위 계수소위가 7일 내 예산심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자체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현격한데다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계수소위가 이날 중 예산심사를 끝낼 가능성은 극히 작다는 것. 결국, 강행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대두되는 이유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비해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당=이에 반해 ‘4대강 예산’의 대폭삭감을 천명해온 야권은 이날 야 5당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시 실력 저지키로 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는 다시 대화를 하고 충분한 심사를 할 것이며 임시국회를 소집해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4대강 예산에 대해 이번 주까지 철저하게 계수소위를 하고 내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 5당은 이날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대비한 실력 저지 대책을 논의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석현 “박근혜 전 대표도 사찰”

민주, 추가폭로 카드로 예산정국 돌파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맞서 민주당이 7일 불법사찰 의혹 추가 폭로 카드를 빼들었다.

민주당은 이날 ‘대포폰 논란’을 처음 폭로했던 이석현 의원을 전면에 내세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이석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현 지식경제부 2차관) 측의 이창화 전 청와대 행정관(현 국정원 소속)이 지난 2008년 상반기 박 전 대표가 서울 강남의 일식당 다다래에서 C& 그룹의 임병석 회장과 식사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업소 사장 등을 상대로 대화 내용을 조사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김근태 전 의원, 이세웅 전 한국적십자사 총재, 이 철 전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 공기업 사장과 노조에 대한 사찰 의혹도 폭로했다.

이번 민주당의 추가 폭로는 한나라당이 전날 밤 예산결산특위 계수소위의 예산심사 기간을 ‘7일 밤 11시’로 지정한 직후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여권의 예산안 강행처리 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사찰 의혹을 거론, 여권의 예산안 강행처리 추진 동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석현 의원은 이날 “사찰보고서 등 서류를 무더기로 감춰놓은 장소를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잖아요”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으며 C & 그룹 임병석 회장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임 회장이) 누구예요”라고 되물었다.

/임동욱기자 tuim@

檢, 입법로비 의원 10일부터 소환

“政資法 개정까지 정상 수사”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이르면 10일부터 연루 의원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7일 “해당 의원들과 일정 조율을 끝냈다. 10일부터 당사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며 다음주 초에 소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연평도 피격으로 국가적 안보 위기상황이 발생하자 국회의원 소환조사 일정을 한미연합훈련이 끝날 때까지 미뤘다.

소환 대상자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서 거액의 후원금을 받아 지난달 5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한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는 청목회 연루의원의 처벌 근거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던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일단 보류하기로 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당분간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지원 “군복무 연장 검토 안돼”

한나라도 환원 반대

최근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는 2014년 18개월로 단축하려던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 여야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등 최근의 안보상황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주장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 21개월까지 줄어든 육군 기준 군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되돌리자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대변인은 “현재 필요한 것은 군 개혁이지 사병들의 군 복무기간 연장이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2014년 7월까지 18개월로 복무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기존 단축계획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대 갈 적령기의 고교생들과 부모 심정을 위해서라도 4대강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현대전에 대비, 국방비를 제대로 증액하고 군비를 강화해 IT 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군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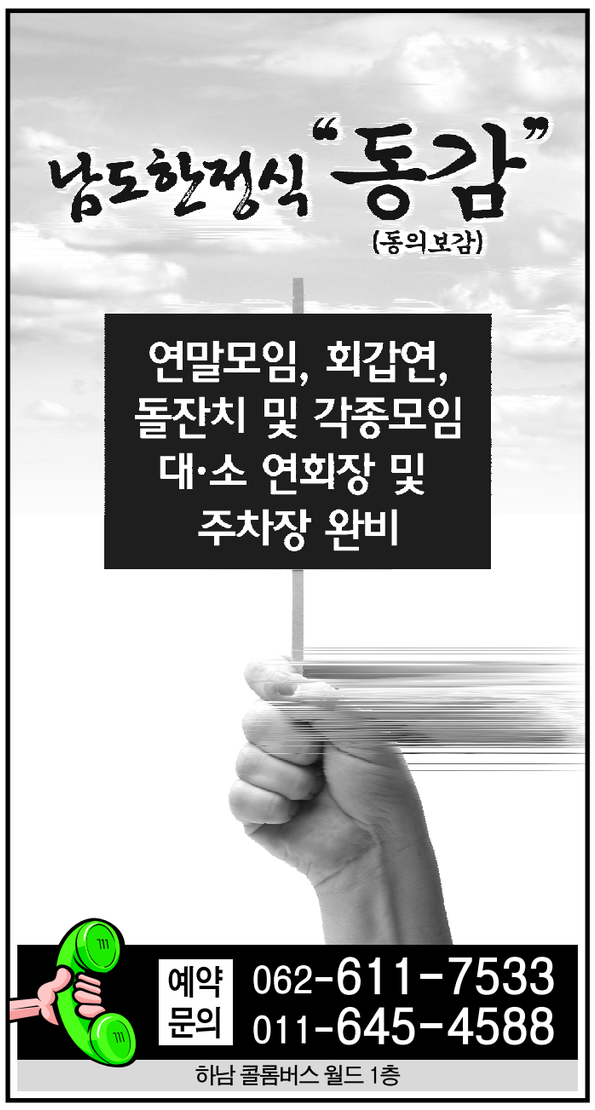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노·진보, 연내 진보세력 통합 논의

민주노동당 이정희,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는 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회동, 진보진영 통합을 위해 각 대표자들의 연석회의를 연내에 추진키로 합의했다.

민노 우위영, 진보신당 강상구 대변인은 대표 회동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양당은 노동자·농민·서민의 열망에 부응해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앞장서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석회의에선 지난 2008년 분당한 민노당과 진보신당 간 통합을 포함, 진보세력간 대통합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들은 또 창당 이전까지의 협력 방안과 관련, “비정규직 철폐, 한반도 평화 실현, 4대강 사업 저지, 한미FTA폐기 등 당면 현안 대응에 적극 공조하며, 양당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매각공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접 | 건물내 상가 성업중

○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09타경 35086호(경매24계)
○ 매각대상 부동산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외 6필지 총대지면적 6,189㎡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752-16, 752-45 위지상 건물 총연면적 8,828㎡
(태우스파랜드 5층찜질방물건 및 상가다수)
○ 최초법사가 (감정가) : 10,193,861,600원
○ 당회최저입찰가 (5차) : 3,651,224,000원
○ 입찰일시 및 장소 : 2010년 12월 30일 (목) 10 : 00
광주지방법원 경매법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경주농협 채권관리팀(054-777-8130~4)
안강농협 채권관리팀(054-761-4485)

2010년 11월 29일

경주농업협동조합
안강농업협동조합